

의 안 번 호	1780	[울산광역시 중구 아동·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] 심 사 보 고 서
--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일 자 : 2021. 6. 11.(금)
- 나. 제 출 자 : 안영호의원 외 10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6. 25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7. 12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(안영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아동·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,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·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,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대상, 지원범위, 지원방법 등(안 제5조~제7조)
- 비용지원, 지원신청(안 제8조~제9조)
- 협력체계 구축 등 정보제공 및 홍보 등(안 제11~제12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,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8조
- 「민법」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경희)

- 본 조례안은 아동·청소년의 부모 사망으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데 아동·청소년은 부모의 재산 및 채무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쉽지 않고, 법률 지식 및 절차를 몰라 곤경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어,

이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·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,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기타 참고

- 아동·청소년 연령 기준 관련 참고

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“아동·청소년”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

다만,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.

■ 청소년 보호법

“청소년”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다만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.

■ 청소년 기본법

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- 용어 참고

■ 상속의 포기

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이다 (민법 제1041조 내지 제1044조).

민법은 유산의 채무초과를 고려하여 상속인의 상속승인·상속포기를 인정하고있다.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그 취지를 제출해야 한다(제1041조).

■ 한정승인

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(遺贈)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(민법 1028조).

※ 조례 제정 현황(2021. 7월1일 기준)

- 울산시 (울산광역시 2020. 9. 24. 제정)
- 전국 총 29개 시·군·구 제정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「 아동복지법 」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-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
「 청소년기본법 」

- 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,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

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「 민 법 」

제1019조(승인, 포기의 기간)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(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.

제1028조(한정승인의 효과)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.

제1041조(포기의 방식)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[제1019조 제1항](#)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1042조(포기의 소급효)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.

제1043조(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)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

제1044조(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) 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.